



김민아 기자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낙태죄 폐지하라

낙태 논쟁

태아 '생명권' 논리의
문제점 8면

청와대,
낙태죄 폐지 회피 2면

세월호, 낙태,
종교세, 노동개혁입법
문재인 정부의
줄타기 3면

민주노총 임원 선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6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7면

1917년
러시아 혁명 100년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
주는 시사점 4~5면

알렉스 칼리니코프 칼럼
독일 연정 수립은
왜 난항을 겪는가 5면

서울 지하철
9호선노조
파업 예고 6면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전주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여론을 의식해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의 부작용, 현실과 법의 괴리 등을 언급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낙태를 부분 합법화한 사례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검토한 안(처벌 예외 조항에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 안)을 소개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낙태 단속·처벌을 강화하려 했고 ‘가임기 여성의 출산 지도’나 만들었다. 그예비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청원에 “친절한 답변”을 내놓고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한 바 있는 조국이 발표자로 나선 것은 많은 여성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류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답변을 긍정적 신호로 여기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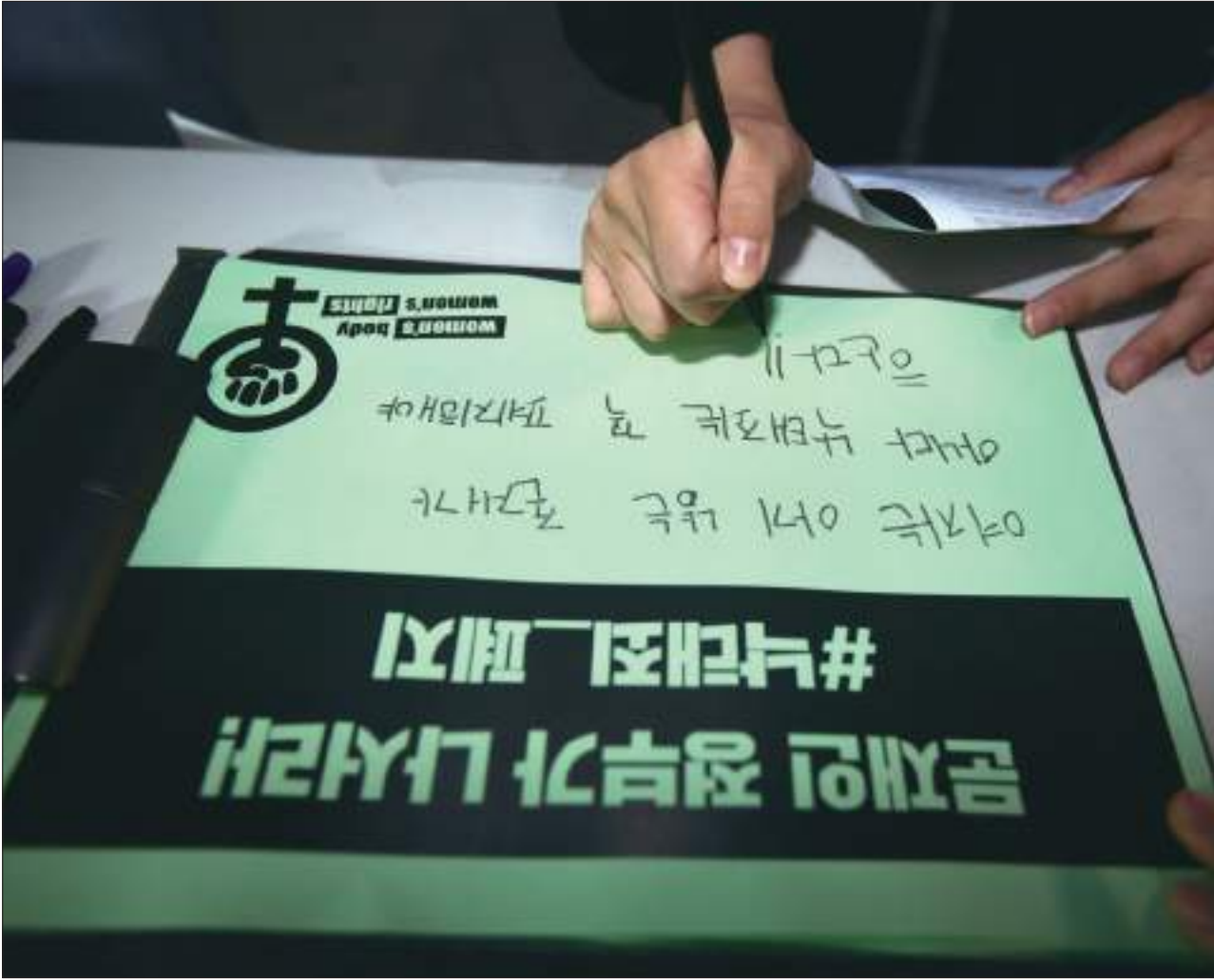
그러나 청와대 발표는 “전향적 태도”라기에는 알맹이가 너무 없다. 청와대는 정작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는 확언한 게 없다. 낙태약(미프진) 도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청와대가 하겠다는 것은 실태 조사뿐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며 말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모호할 뿐 아니라, 정부 자신의 책임을 흐리는 것이다.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사회적·법적 논의를 통해 판단 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는 아쉽다”고 옹계 논평했다.

실태조사야 나쁠 건 없지만, 실태를 몰라서 낙태죄 폐지 여부를 결정 못하는 건 아니다.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여성들(특히 노동계급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아 왔는지, 현실과 법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는 이미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미 23만 명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동참한 것 자체가 “실태”를 보여 준다.

실태조사가 꼭 낙태죄 폐지에만 힘을 실어 준다는 법도 없다.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천주교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낙태를 근절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실태 조사 결정에 찬성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얼마든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오히려 낙태하는 여성이 비도덕적이라고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권리 성취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조국은 “태아 vs 여성”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소중한 권리”(조국)라고 인정하면 여성의 결정권을 온전하게 옹호하기 어렵다. 태아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임신한 여성 신체의 일부일 뿐이므로, 여성의 권리를 지지한다면 태아의 생명권 논리를 받아들이는 안 된다(자세한 얘기는 본지 8면 참조). 또한 낙태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태아의 생존이나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나의 대립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분명히 지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폐지 운동과 낙태 반대 세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일 뿐이다. 이런 어중간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든지 우파의 압력에 타협할 수 있음을 뜻한다. 반낙태 그리스도교 우파들은 알맹이 없는 ‘사회적 논의’조차 반발하며 대대적인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는 천주교의 강한 반발

을 달래려 조국 수석을 보내 낙태 반대 입장을 “겸허히 청취”하게 했다. 그 전에 문재인은 참모진에게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오해없도록 잘 설명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독립적인 낙태 권리 운동을 건설하자

조국이 답변에서 OECD 상당수 국가에서의 부분 합법화 모델을 자세히 소개한 것을 보며 청와대가 낙태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는 독일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독일식 방안을 “태아 vs 여성”의 대립, “전면금지 vs 전면허용”의 대립을 넘어서실 묘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이 방안의 문제점은 본지 229호,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사유나 기간 제한이 있는 부분 합법화는 현행법보다는 낫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가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여성의 온전한 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요청만으로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낙태 결정권을 조건 없이 보장해야 한

다. 또한 낙태 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무상으로 낙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낙태가 합법화돼도 비용이 지원되지 않거나 시술 병원(과 의사)을 찾기 힘들면 낙태 권리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이 부분 합법화 방안을 언급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이를 추진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청와대는 내년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낙태 위헌 심판이 “새로운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현재에 떠넘기거나 공문화위원회 카드도 사용하려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문화위원회를 구성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묻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얘기는 정부의 부담은 피하고 현재와 ‘공문화위원회’ 등에 공을 떠넘

기며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에, 현재는 또다시 ‘공문화위원회’에 서로 눈치보고 떠넘기며 무한정 연기될 공산도 있다.

신고리 핵발전소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공문화위원회’가 “소통”이라는 그럴 듯한 모양새를 앞세워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개혁 약속을 뒤집는 꿈수가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 일에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들러리 서는 뼈아픈 경험도 했다. 낙태죄 폐지 운동은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낙태 문제는 지배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쟁점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굴러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노동력 재생산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가족제도에서 경제적·이데올로기적 이득을 보는 것은 단지 우파들만은 아니다.

특히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보수 세력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낙태죄 폐지를 단행할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진성 헌재 심임 소장과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제한적 낙태 허용’에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지배자들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보수적인 국가기구 현재의 재판관들이다. 아래로부터 압력이 막대하게 크지 않다면 현재가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 낙태권 운동의 경험으로 보건대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손쉬운 지름길은 없다.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중 운동이 되려면 특히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 애써야 한다.

2017 검은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일시 : 12월 2일(토) 오후 2시
장소 : 세종공원 앞 인도
주최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강력 추천 |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더 월 If These Walls Could Talk
감독 : 낸시 사보카
개봉년도 : 1996년 / 상영시간 : 95분

베라 드레이크 Vera Drake
감독 : 마이크 리
개봉년도 : 2004년 / 상영시간 : 125분

※ 영화 소개글은 본지 웹사이트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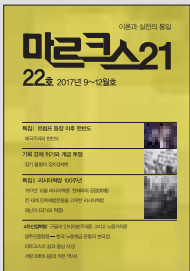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한국지엠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 ★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 ★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 신차 강제 투입 반대 파업
- ★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 통과시켜라

- ★ KT노조 선거 본사본부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돌파구를 열다
- ★ 고구려가 중화민족의 일부?
- ★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 ★ 문재인 정부 조각 완료, 개혁이라기엔 불충분
- ★ 성소수자는 HIV/에이즈 원인이 아니다
- ★ NGO, 비정부가구인가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인가

새로 나왔습니다



마르크스21 22호

특집! 트럼프 등장 이후 한반도 제국주의와 한반도 기획 경제 위기와 계급 투쟁 장기 불황의 정치경제학
특집II 러시아혁명 100주년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 현재와의 공명(共鳴) / 전 세계 민족해방운동을 고무한 러시아혁명 / 레닌의 《국가와 혁명》

값 11,000원
※ 구입 문의: 도서출판 책갈피 Tel 02-2265-6354 | Email bookman@naver.com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지난 주말, 정부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에 섰다.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 데서 크게 빛진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일로,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지지 기반의 큰 부분이 이반하는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관련 기사: 김승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특히, 해수부 장관 김영춘이 여권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

그래서 11월 26일 청와대는 노무현이 2004년 8월 이라크 파병 사실을 덮고자 국가보안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해 4개월간 진보진영을 자기에게 묶어 뒀던 것과 비슷한 책략을 부리기로 했다.

당시 진보진영은 노무현의 파병에 크게 환멸을 느끼고 그에게서 이반하려던 찰나에 보안법 "개·폐"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그 최대의 악법 폐지 운동에 나섰다. 그해 12월 중·하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민통계 활동가 5000명과 다합계(노동자연대의 전신) 회원 300명 등 민주노동당원 중심의 시위대 6000명이 며칠 동안 보안법 폐지 촉



홍성호 작가

구 집회를 열었다. 결과는 노무현에게 우롱당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말이다.

해수부 은폐 파문 확대를 막고자 청와대는 낙태죄가 "부작용이 많으므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진보 측 무마하기에는 보수 측 무마하기도 수반돼야 했다. 특히 낙태죄 완화(또는 그 제스처!)에는 그리스도교 우파를 무마해

야했다.

그래서 민정수석 조국은 마치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하 교종)이 낙태 허용을 시사하기라도 했던 양하는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개신교 우파를 무마하고자 청와대는 종교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악명 높은 개신교 우익단체 한기총 등은 자신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 측은 조국의 책략에 발끈했다. 반박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전국 교구에 100만 서명 운동을 지시했다.

사실 가톨릭 교종은 낙태를 허용한 적이 없다. 만약 그랬다면 가톨릭 교회가 발각 뒤흔쳤을 것이다. 프랑스/오스트리아계 브라질인으로 노동자당(PT) 지지자였던 미카엘(미셸) 뢰비는 그의 저서 《신들의 전쟁》(그린비, 2012)에서 라틴아메리카 해방 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심지어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조차 상당 부분 받아들였어도 낙태 문제를 포함한 전통적 가정 가치관 문제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모르면 몰라도, 가톨릭 교회가 낙태 허용 입장을 취하려면 교종의 입장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교황 무오류' 교리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저당

세월호 참사 항의 중에 방한한 가톨릭 교종의 발언이든, 지금 미얀마 방문 중인 (로hing야 관련으로 기대되던) 그의 발언이든, 조국이 거두절미

하며 인용한 그의 발언이든 가톨릭 교종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직설을 발화하는 일은 없다.

지배자들이 책망받기를 원하는 공통받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층에게서 그런 예언자를 발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노동 관련 개혁입법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개악 시도와 이를 위한 포퓰리즘적 줄타기가 가관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유지시키고자 근로기준법 개악을 기도하고 있는 집권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내세워 온건 노동계를 저당 잡힌 신세로 만들려 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운동도 이런 뜻에 유의해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렇기에 낙태죄 폐지 운동은 민주당 정부에 저당 잡히지 않도록 그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특히, 태아 대 여성 '이분법'의 지양 따위 운운하는 중도파의 본질 흐리기에 시간 낭비를 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국가와 남성에게 모두 책임을 묻기보다 국가에 책임 묻기에 집중해야 한다. 여성의 삶과 건강은 개혁가인 척하는 위선자들의 장기판 놀이 되기에는 너무도 사회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투쟁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한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상납된 것도 드러났고, 그 결과로 박근혜의 국정원장들인 남재준과 이병기도 구속됐다.(이병호는 박근혜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구속을 면한 듯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부가 예산 책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니, 자기들이 쓸 돈을 자기들이 편성하고 자기들이 통과시켜 국정원에 박아 놓은 것이다.(국정원 활동비 수회 의혹을 받는 최경환이 예산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었다.)

여기까지 밝혀지는 과정에서 우파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파견돼 국정원 비리 은폐를 공모했던 검사 변창훈이 구속 직전 자살한 것이 한 계기였다. 검찰이 자기 칼날로 자기 식구를 친 셈이 됐다. 황교안의 공안검사 라인이나 우병우 라인이 요직에서 하루아침에 사라



박근혜 정부 시절

반격의 시작? 정치공작의 일부인 전 국방장관 김관진이 석방돼 촛불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질 리도 없다.

그래서 청와대 현직 정무수석이던 전병헌이 순식간에 비리 피의자로 몰려 구속 직전까지 갔을 때, 정부는 당황했던 것 같다. 11월 20일 공개적으로 당정청 긴급 회의를 열어 (검찰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연출했다.

법원 내 동향도 이미 심상치 않았다.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더니, 국정원과 방송 장악을 협의한 것이 알려진 전 MBC 사장 김재철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결국 판사 신광렬은 구속돼 있던 김관진과 임관빈(보석)을 구속적부심에서 각각 22일, 24일에 석방했다. 신광

렬은 KTX 여승무원의 복직 재판에서 노동자 패소 판결을 내린 매우 반동적인 인사다. 공교롭게도 우병우와 고향(TK)도 같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된 김관진·임관빈을 '범죄 무무를 다 두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풀어 줬다. 향후 1심에 영향을 미칠 의도일 것이다. 영장심사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구속적부심은 이용하지 않는 추세다.(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등 누구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구속적부심을 김관진과 임관빈이 신청하고, 거기에서 아무 새 반증도 없이 석방된 것은 군부 등 지배계급 내 우파의 조직적 반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군부의 불만과 관계 있을 것이다. 군부는 심리전이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고 강변해 왔다.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 군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 등 반국가 세력과 정당한 안보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였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국방장관 송영무가 김관진 석방이 "참 다행"이라고 한 것에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명박으로 확대되던 수사를 일단 차단하는 효과를 낸 김관진 석방은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지배계급 내의 반감도 보여 준다. 아주 초보적인 부패 행위 수사조차 국가기관 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에 의해 견제·방해받은 것이다.

날뛰는 우파와 세력 균형

이 때문에 보수적인 검찰조차 반발한 듯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국정원의 범죄는 반헌법적이고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체제가 안정된다는 논리인데, 윤석열의 팀답다.

이런 종류의 체제 수호 논리조차 우익 지배자들이 관용할지는 향후의 정치적 세력균형에 달려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월호, 사드 배치 반대 등의 시위 참

가자들에게 사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적폐 청산 수사 약화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조차 좌우 양쪽을 만족시킬 것 같지는 않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석기 전 의원 등 석방·사면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식 정치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망언 퍼레이드는 그런 정치 양극화의 표현이자 조응이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박근혜는 재판 거부 투쟁을 벌이고, 최순실은 통곡으로 자기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의 구 여권 수사가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에 등 떠밀린 것인 만큼 우파의 반격은 계급세력관계를 박근혜 몰락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들은 송영무, 김동연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너 씨클)과 연계된 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전병헌 수사는 문재인 정부 자신도 부패 고리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촛불의 염원을 이어 가려면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세월호 특별법은 그 부정적 결과다) 독립적이고 더 급진적인 정치와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노동자 운동 안에서 그 래야 한다. 이것이 좌파가 할 일이다.

김문성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승일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러시아 혁명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오늘날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축하받는 일이 거의 없다.

50주년이었든 1967년에는 사정이 매우 달랐다. 서방과 대결하던 소련 측 볼셰비 자신의 정통성을 러시아 혁명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국가를 통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러시아 정부는 프트르스 톨리핀을 영웅으로 추앙한다. 스톨리핀은 혁명 전 러시아 제정의 총리로서 혁명가들을 교수형으로 처형한 인물이다.

또, 혁명으로 타도돼 숲에 버려졌던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유골은 1990년대 초에 발굴돼 별도의 호화로운 방에 안치되었다. 현재 니콜라이 2세는 성인(聖人) 대접을 받고 있다.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히스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 연계 혐의를 둘러싼 논란을 봐도 알 수 있다.

학계도 마찬가지다. 1960~1970년대에는 사회적 급진화로 말미암아 러시아 혁명을 현실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이 거의 없다. 학계의 통설은 1917년 10월 혁명을 퇴행적 쿠데타이고 러시아를 혼돈과 전체주의로 빠뜨린 것처럼 그린다. 이런 관점은 올랜도 파이지스의 〈민중의 비극〉이 다루는 이른바 “사회사”나 레닌을 지독히 싫어하는 리처드 파이프스의 연구 같은 더 전 통주의적인 서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파이지스는 1917년 10월 24일 페트로그라드를 순찰하던 경찰들이 “무해한 취객”으로 가장하고 스톨니 학원으로 향하던 레닌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긴 것을 애용해 한다. 경찰들이 레닌을 알아봤다면 “역사는 매우 다르게 전개됐으리라”는 것이다. 스톨니 학원은 10월 봉기를 조직한 소비에트 군사혁명위원회가 쓰던 건물이다.

좌파들도 조용한 편이다. 최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관

심을 일으키는 데 크게 한몫한 데이비드 하비는 처음부터 레닌주의와는 거리를 둔 인물이다. 하비는 최근에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의식적으로 조직된 반자본주의적 혁명 운동(레닌주의의 설명으로는 전위정당)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극도로 결합이 많은” 운동이라고 일축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영국공산당에 충실했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자신의 유명한 3부작의 하나인 〈극단의 시대〉의 부제를 ‘단기 20세기: 1914~1991년’이라고 지었다. 이런 시기 구분은 10월 혁명과 함께 시작한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함축한다. 실제로 홉스봄은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1980년대 말 허물어진 세계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세계였다. … [현재는] 10월 혁명의 종말에서 살아남은 세계이다.”

홉스봄은 러시아 혁명을 이렇게 평가한다. “10월 혁명의 비극은 무자비하고 잔혹한 지령 사회주의를 낳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1917년 10월 혁명과 스탈린 체제의 단절성

1917년 10월 혁명과 스탈린 체제의 등장을 연속선상에 놓고 보는 관점은 국내에도 흔하다. 이런 관점들은 주요 자본주의 열강이 혁명 러시아를 침공하고 옛 지배계급이 지휘하는 군대가 내전을 일으킨 사실이 미친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전 탓에 러시아 전역에서 식료품이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 인육을 먹는 일마저 벌어지고 각종 질병이 창궐했다. 산업은 붕괴하고 노동계급은 죽거나 식량을 찾아 흩어지면서 거의 해체 상태였다. 즉,

러시아에서 나타난 노동계급의 혁명적 민주주의는 제국주의의 개입과 옛 지배계급의 반동에 질식사했다.

이런 패러 속에서 스탈린이 등장했다. 스탈린은 자신의 지배를 안정화하기 위해 볼셰비키 간부들을(정치적으로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제거해야 했다. 최초의 혁명 정부를 구성한 15명 중 10명이 스탈린에 의해 처형당하거나 살해당했고 4명은 자연사했다. 딱 1명만이 살아남았다. 바로 스탈린 자신이었다. 이 인적 청산은 매우 급속한 산업화를 위한 농업 강제 집산화 등 농민 세력의

궤멸, 노동자 파업권 박탈 등 민주주의 파괴,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해방적 조치의 전복과 함께 일어났다.

그래서 트로츠키주의 전통은 1917년 10월 혁명이 스탈린 체제를 낳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국제사회주의경향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소련이 스탈린 체제로 변모한 것을 반혁명적 과정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2009년 작고한 트로츠키주의 전통의 결출한 활동가 다니엘 벤자이트가 홉스봄의 ‘단기 20세기’ 정식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1989~1991 소련 해체와 동구권 붕괴의 의미

그런데 “10월 혁명의 종식”이나 “제1차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과 함께 시작된 거대한 순환의 종식”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벤자이트가 말했듯이, 1989~1991년에는 분명히 지정학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미국이 국제적 헤게모니를 갖는 데서 결집들이 된 소련 블록이 해체됐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일반화에 일조했다.

“노동운동 내 여러 조류들의 지향과 구성 변화”도 일어났다. 스탈린이 집권한 뒤 소련에 통집감을 느끼던 세력들이 소련의 붕괴와 함께 퇴조했다. 서방 세계 공산당 중 가장 중요했던 이탈리아 공산당의 몰락이 대표 사례다. 현재 영향력이 있는 공산당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요컨대, 1989~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는 세계 자본주의가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서 신자유

주의적으로 재조직되고 공산당 운동이 퇴조한 장기적 과정의 급격한 시작이었다.

그러면 1917년 10월 혁명은 현재의 활동가들에게 말해 주는 바가 전혀 없을까? 그렇지 않다. 10월 혁명은 단지 혁명적 영감을 줄 뿐인 사건이 아니다. 전략적 의의도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10월의 교훈)에서 새 세대가 10월의 경험을 차근차근 배우며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919년, 10월 혁명 2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모인 소비에트 대표들(가운데 레닌과 그 오른쪽에 트로츠키가 있다)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과 러시아 혁명

우선 로자 룩셈부르크가 던진 “개혁이나 혁명이나”는 물음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10월 혁명은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이다.

최근 좌파적 개혁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영국의 제러미 코빈, 프랑스의 장푀 뮈랑송, 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스의 시리자가 그 사례다.

그런데 문제는 좌파적 개혁주의 정부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주의의 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혁명적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자본주의를 타도한 최초의 성공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은 1917년 10월의 러시아와 현재는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옳은 지적이다. 당시의 러시아는 농업이 압도적인 사회였고 따라서 인구의 압도 다수가 농민이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트로츠키가 말한 ‘불균등 결합 발전’ 이론을 떠올려야 한다. 당시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낙후한 사회였지만, 국가 주도의 급속한 공업화로 서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크고 집중된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 노동계급은 그 규모를 뛰어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정치 면에서 러시아 노동계급은 선진적이었다. 1905년 혁명에서 새로운 권력 기구인 소비에트를 탄생시켰다.

러시아 혁명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융합된 일관된 사건이었다.

당시 모든 사회가 공유한 것은 제1차세계대전이었다. 압도적으로 농촌 사회인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10월 혁명에서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쟁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농민들의 토지 점유를 지지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말해 제1차세계대전 발발은 1945년 8월에 끝나는 혁명과 반혁명의 시대를 열었다.

러시아 혁명의 특수성은 당시 러시아에 서구 사회들과 달리 강력한 개혁주의 전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모든 혁명적 투쟁에서는 옛 체제가 위기에 빠진 이후에 개혁주의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멘셰비키가 그 사례였다.

그 뒤로도 1980년대 폴란드의 연대노조, 브라질의 노동자당, 남아공 공산당 사례가 있다. 더 최신 사례로는 2011~2013년 이집트 혁명의 무슬림형제단이 있다.

이런 사례들은 노동자 투쟁의 자기 제한적 경향을 보여 준다. 이는 자본주의의 착취와 소외로 말미암은 노동자들의 자신감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자신감 부족을 극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개혁주의 전략이 실패한다는 실천적 경험. 둘째, 그런 전략을 뛰어넘을 노동자 스스로의 조직 경험. 셋째, 노동계급이 그로부터 필요한 정치적 교훈을 배우는 데 일조할 대중적 혁명 정당의 존재.

최근 우리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지만 겉으로는 상충하는 듯한 두 가지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때 강력한 정당들이 (이탈리아 공산당처럼) 자살 행위를 보며, 정치 면에서 러시아 노동계급은 선진적이었다. 1905년 혁명에서 새로운 권력 기구인 소비에트를 탄생시켰다.

이 두 현상은 사회민주주의의 장기적 쇠락이 낳은 결과이다. 그 과정은 사회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며 사회자유주의로 변모하며 더 촉진됐다.

그런데 그리스 시리자의 사례를 보면 새롭게 떠오른 개혁주의가 유동성과 불안정을 낳고, 이것이 혁명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혁명가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말이다.

러시아 혁명의 정치적 혁신

바로 이 맥락에서 10월 혁명이 제공하는 진정한 정치적 혁신 두 가지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첫째는 소비에트와 이원(이중)권력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이 여러 역사적 경험에서 입증됐다. 여러 나라에서 혁명적 투쟁이나 그에 준하는 투쟁이 벌어질 때면 러시아의 소비에트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그것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조직이 탄생했다.

둘째는 볼셰비키당이다. 혁명의 필요성은 매우 독특한 형태의 정당을 요구한다. 그러나 볼셰비키당은 레닌이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조직이 탄생했다.

카를 카우츠키의 분석에서 혁명 정당은 그저 역사의 흐름을 잘 타는 정당이다. 카우츠키는 자본주의가 혁명으로 로만 타도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혁명가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에게 혁명 정당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조화로 운 융합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볼셰비키의 실천은 바로 그 “조화로운 융합”이라는 가정을 반박했다. 게다가 볼셰비키는 혁명을 일으키는 정당이었다. 계급 투쟁에 적극 뛰어들어 그 투쟁이 혁명으로 나아가도록 애썼다는 면에서 그렇다.

레닌이 1917년 가을에 쓴 저작들을 보면 자본주의가 저절로 타도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볼셰비키가 제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볼셰비키와 러시아 노동계급은 반혁명 세력에게 분쇄됐을 것이다.

그리고 1917년 4월에서 10월까지 볼셰비키가 노동계급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체계적으로 기울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 하나는 나중에 공동전선으로 불리게 된다.

볼셰비키당은 민주적 구조 덕분에 노동자와 병사들의 급진화를 반영하

고 그들이 권력 장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수 있었다.

볼셰비키당이 러시아 대중의 지지를 받는 민주적 정당이었음은 알렉산더 라비노비치의 연구 결과에서 잘 알 수 있다. 라비노비치는 이렇게 말한다. “거의 모든 기존 서술에서 묘사한 바와는 달리, 1917년 페트로그라드의 볼셰비키당은 레닌이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조직이 탄생했다.”

그러나 볼셰비키당 내 논쟁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또, 그저 논쟁만 한 것도 아니었다. 1917년 가을 볼셰비키당 내에서 봉기를 조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봉기를 주장했다.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는 반대했다. 결국 레닌과 트로츠키가 승리했고 봉기는 실행됐다.

혁명을 일으키려는 정당이 당내 논쟁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놔두거나 당내 소수가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정당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혁명을 지향한다면 혁명을 일으키는 정당으로서 볼셰비키당 모델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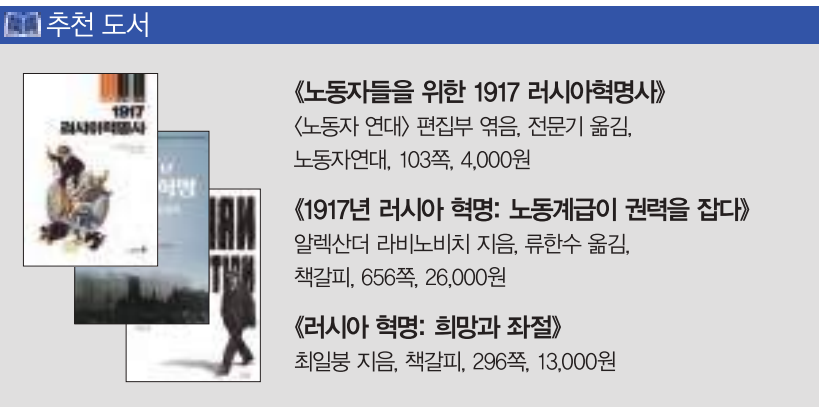
문제는 소비에트라는 정치적 혁신

보다 볼셰비키라는 정치적 혁신을 적용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볼셰비키가 여러 해 동안 대중 투쟁과 반동, 탄압과 해의 망명 등을 거치며 스스로를 조직해 나간 길고도 험난한 과정은 손쉽게 대체할 도리는 없다.

물론 러시아 혁명은 패배했다. 그러나 2007~2008년의 위기와 그 뒤의 장기 침체, 지배자들에 맞선 저항을 탓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10월 혁명이 현재에도 의미가 있음을 설득하기 유리할 것이다.

오늘날 대중이 스스로 만들 조직(소비에트)과 대중적 혁명 정당의 결합은 1917년 러시아와는 매우 다른 조건에서 매우 다른 형태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보여 준 1917년 10월의 경험은 피식되지 않을 것이다.

※ 이 기사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마르크스주의 계간 잡지 〈인터네셔널 소셜리즘〉 156호(2017년 가을)에 기고한 ‘The orphaned revolution: the meaning of October 1917’을 많이 참고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독일의 연정 수립 난항은 유럽 중도계 세력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논의들을 보면, 영국 측은 취약하고 혼란을 겪는 반면 유럽연합 측은 강하고 단결돼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영국 측이 취약한 것은 맞지만 유럽연합 측이 꼭 여유 만만한 것은 아니다.

유로존 경제가 드디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11월 낮게 주에 공개된 수치들을 보면, 2017년 4분기 유로존 경제는 전년 대비 3퍼센트 성장할 듯하다.

이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수출 붐이 일고 있는 독일이다. 하지만 육에 타가 있으니, 바로 정치 상황이다. 9월 독일의 총선 결과를 보면 오늘날 서방 자본주의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독일에서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중도계 정치 세력들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기민당·기사당 연합(이하 기민당)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독일 정치를 양분하는 주요 세력인데, 두 정당은 합쳐서 53퍼센트를 득표했다. 1949년 서독이 수립된 이래 두 정당이 거둔 최악의 선거 결과이다. 한편 이주민과 유럽연합에 적대적인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당은 약진했다.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획득했다.

사민당 대표 마틴 शु츠는 2013년 이래로 기민당과 함께해 온 대연정을 탓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10월 혁명이 현재에도 의미가 있음을 설득하기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메르켈은 더 작은 정당들인 녹색당, 자유민주당과 연정 협상을 벌였다. 두 정당 모두 지조 없는 신자유주의 정당이지만, 11월 20일에 기민당 지도자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연정 협상을 중단했다. 독일 자민당은 갈수록 유럽연합에 회의적으로 되고 있다.

연정협상이 중단된 까닭은 린트너가 유로존 통합 강화 움직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신인 중도계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유로존 통합 강화를 제안했는데, 메르켈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내고 싶었지만 린트너는 그럴 의사가 없었다.

기민당과 사민당으로 대표되는 주류 기성체제의 합의에 맞서겠다고 자임하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이 더욱 커지게 된 사회적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반란을 주도하는 세력이 린트너 같은 무리나 독일을위한대안당이려면 비극일 것이다. 좌파 정당이 디링케[독일어로 ‘좌파’라는 뜻]는 9월 총선거인 9.2퍼센트를 득표하며 미세하게 성장했다. 하지만 디링케는 너무나도 쉽사리 우파들이 유럽연합 반대 정서를 주도하도록 내줬다. 기존의 독일 정당 질서가 위기로 향하는 지금, 디링케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이 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82호 / 번역 김중현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쟁을 강조하는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에게 지지를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00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 그런 만큼 문재인 시대 민주노총의 정책 방향과 과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3번 윤해모 후보조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하고, 선거 운동 내내 노사정위 복귀를 단연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했다. 심지어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으로 민주당 지지도 떨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 후보조 가운데 가장 오른쪽이다.

네 후보조 가운데 1번 김명환 후보조와 4번 조상수 후보조가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만큼 이제 민주노총도 변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투쟁과 대화의 병행”을 강조하는 것은 그간 민주노총이 “반대와 저지”, “투쟁 일변도”였다는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1번 김명환 후보조와 4번 조상수 후보조는 선거운동 내내 서로 차이를 부각하고 싶어 했지만, 선거 핵심 쟁점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대화 문제에서는 엇비슷한 입장이다.

1번 김명환 후보조는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에서 “투쟁, 교섭, 대화, 대안 제시, 견인” 등을 병렬적으로 언급했다. 노사정위는 반대하면서 8자가 참가하는 새 노사정 대화틀을 제시했다.

4번 조상수 후보조는 “일면 교섭 일면 투쟁, 일면 협력 일면 비판”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함께 이뤄나가고,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노동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섭과 투쟁과 협력?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 자신이 설정한 적폐의 청산에도 미온적임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처지에서 정의된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계급에 이익이 되는 사회개혁을 이루려면 문재인 정부와 투쟁을 해야 한다는 점이 압도적으로 강조돼야 할 것이다.

조상수 후보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노동개혁 과제로 삼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이 참말일지라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들(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체계 개편 등)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위험마저 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조상수 후보는 정부와의 신뢰가 구축돼야 노사정 대화가 가능하다는 면서도, 사안별 노사정 대화를 당장 하겠다고 한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그런 사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며칠 전 집권 여당의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그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조상수 후보조는 ‘투쟁 전략’으로 ‘연대노총’과 ‘사회세력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투쟁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총연맹의 정책 제시 능력, ‘공중전’에 강조점이 있다. (1번 김명환 후보조와 4번 조상수 후보조의 다른 정책·공약에 대한 분석은 다섯 차례 걸친 본지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자신감

2번 이호동 후보조는 1번 김명환 후보조나 4번 조상수 후보조에 견줘 명백히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고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호동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지지율이 높지만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들의 요구와 목표를 갖고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동 후보조는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 강요를 반대하며 대정부 교섭을 주장한다.

‘일자리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같은 번지르르한 말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불만도 점차 쌓이고 있다.

이럴 때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에 상대적으로 더 기운 지도부보다 그에 맞서 싸우겠다는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성화되는 데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지도자들의 교섭과 대화를 수동적으로 지켜볼 때보다 스스로 투쟁을 나설 때 자신감과 조직을 강화할 수 있다.

혁명적 좌파는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전망과 지향을 제안하면서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노조위원장(이호동)이 서울 지하철 9호선 파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이하 9호선노조)이 11월 30일 파업에 들어간다.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구간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참아” 왔으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서울시메트로의 경우 1킬로미터 운영에 평균 70명, 철도공사의 경우 약 40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데 비해 9호선은 약 15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만 봐도 9호선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강도 노동에 허덕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9호선노조의 발표를 보면, 기관사들은 “새벽 4시 반 출근[하고], 쉬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졸음운전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기관사들은 1인 승무를 하는데도 1~8호선 승무원보다 월 평균 3~4일을 더 일한다. 한 번 운행 시 운전 시간도 1~2시간이 더 길다.

역무 노동자들은 역사(驛舍) 25곳 중 10곳에서 상시 1인 근무를 하고 있다. 한 역무 노동자는 “식사를 하다가도 승객들의 꼴이 오면 업무를 봐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민자 지하철이라 공익근무요원조차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다.

기술 분야 노동자들은 4조2교대로 근무해 3일에 한 번 밤샘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세 차례나 추가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고강도 노동에도 임금은 다른 지하철 노동자들에 견줘 더 낮다.

반면 9호선의 1인당 수송실적은 1~8호선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9호선은 갈수록 승객이 늘어, 애초 예측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9호선 노동자들은 적은 인력으로 고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이,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은 승객들의 안전

을 위협하고 있다. 1인 승무와 1인 역사, 과도한 노동강도가 강요되는 조건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완강한 민간 사업자, 외면하는 서울시

그러나 지하철 9호선 사측은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인력을 충원하면 인건비가 늘어나 이윤이 줄기 때문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과는 달리,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 지하철이다. 이 명박은 서울시장 시절에 9호선 건설 비용 중 일부를 민간에서 끌어온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30년 동안 운영권을 부여했다.

지하철 9호선은 2012년 과도한 요금 인상 시도로 논란을 빚었고, 결국 2013년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그후 박원순 시장은 “9호선 문제는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9호선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실태에서 보듯,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9호선 운영 회사는 매해 수십억 원씩 배당금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 운영 회사는 RDTA(파리교통공사와 베올리아 합작)와 현대로템이 각각 8억 원과 2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인데, 지난 7년 동안 순이익의 87퍼센트인 234억 5000만 원이 RDTA의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자들 역시 서울시 재정 지원으로 매해 수백억 원씩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9호선을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분 구조가 바뀌더라도 세금과 운영 수입으로 국내외 민간 투자자들의 배를 불러 주면서, 노동자들은 가혹하게 쥐어짜는 구조는 근본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9호선 운영을 민간 투자자에게 내맡기지 않고, 서울교통공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9호선 운영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어떤 대책도 밝히지 않고 있다. 지하철 9호선에 84퍼센트를 투자한 ‘최대 주주’인 서울시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척 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불만

9호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1월 노조를 결성했다.

그 뒤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완강하게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9월 85.3퍼센트의 높은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사측이 자신들의 안이탐시고 내민 것은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대폭 깎아 그 돈으로 인력을 일부 충원하자는 것이었다. 사측의 이런 대응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치솟았다.

노조는 12월 20일로 예정했던 파업을 11월 30일로 앞당겼다. 9호선 노조 조직부장은 “조합원들은 이보다 더 일찍 파업에 들어가기를 바랐을 정도로 불만이 높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9호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관심과 지지가 모이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과 지하철 안전을 위해 첫 파업에 나서는 9호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정원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럴듯한 말들로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노동계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조삼모사 방식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행정해석 폐기를 미뤘고, 그러는 사이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이하 환노위)에서 민주당(간사 한정애 의원)이 야당 간사들과 합의한 개악안의 핵심은 주52시간 상한제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휴일 연장근로에 중복할증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격차 해소 주장의 위선

주 40시간 노동과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11월 28일 근기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포함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해 왔다. 이 파렴치한 행정해석의 목적은 휴일에도 중복할증수당을 주지 않고 노동자들을 싼 품삯으로 오랜 시간 부려 먹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을 포함해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개악안은 방법만 다를 뿐, 노동자적인 행정해석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

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것이다.

게다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중복할증수당마저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계속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게 된다. 집권 여당이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줄 것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집권 여당의 진정한 관심사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개악안의 취지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주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10월에 기업인들은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요구했고, 홍위원장은 “중복할증 불가” 입장을 밝히며 화답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격차 해소 운운하며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해 왔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양보인지 이번 개악안 소동으로 밝히 드러났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악안이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라면서 이렇게 꼬집었다. “잘못된 행정해석을 한순간에 바로잡으면 기업이 지게 될 부담이 걱정된다고 한다. ... 부당한 법 적용으로 십수 년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 온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

노사정 대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는 어제인 28일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집권 여당의 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선, 정기국회 폐회 전에 환노위 소

위가 열릴 수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을 우선 다루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뒷전으로 미룬 채 근로기준법 개악을 재시도할 수도 있다.

게다가 홍영표 위원장은 행정해석이 폐기되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재논의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분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개악 방향을 거둬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것은 기껏해야 “숙려 기간”이다.

또, 민주당 내에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보상휴가제’나 ‘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한 한시적 면벌 조항’ 등도 주 52시간 상한제 즉각 시행과 휴일 연장근로의 온전한 수당 지급을 피하는 방안들일 뿐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시간 문제를 노사정 대화로 풀자며 대타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제는 민주노총 새 위원진의 몫이 될 수 있다. 노동운동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고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들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11월 29일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9월 15일 이후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하는 와중에도 강화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와 군사적 압박 때문이다.

우선 최근 상황의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앞서 11월 초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자신들은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북한을 향해 으르렁댔다. 그 와중에 러시아 등지에서 북·미 물밑 접촉이 있었지만, 항공모함 3척까지 동원한 트럼프의 대북 강경 공세 속에 별무소용이었다. 중국의 대북 특사는 북한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 직후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했다.

21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 무역업체, 북한 무역해운업체와 선박 등 북한의 수출입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이 제재는 트럼프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의 후속 조치였다. 이를 두고 해상 봉쇄라는 말이 나온다. 해외를 오가는 북한 선박과 해운업체를 집중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과의 직접 교역이라는 면에서 보면,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적을 수 있다. 북한 선박이 라선과 시애틀을 오가지는 않으니까



이것은 도발이 아닌가? 핵잠수함까지 동원한 한·미의 군사행동

말이다. 그리고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킨 중국 기업과 기업인도 미국과 직접 달러 거래를 할 만한 수준의 거대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제재 강화는 군사행동의 명분이자, 그것과 결합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처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미국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붙잡아 검문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제재 협조를 압박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이 조처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 리스트에 야금야금 계속 올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번 제재를 두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까닭이다.

그래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젠 중국마저 미국이 주재한다고 느낀다”며 이번 제재 조처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북한 문제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니 여전히 중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 진지하게 추진할수록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은 더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함께, 미국

은 호전적 군사행동도 연이어 벌어졌다. 미군 항공모함 3척이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벌인 데 이어, 22일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합동 공군 훈련도 예정돼 있다.

문재인의 방중과 평창 올림픽

문재인의 12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3불’(사드 추가 배치, MD 편입, 한·미·일 동맹은 없다) 선언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 한반도가 깊이 연루돼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한·중 통화 스와프를 연장해 주고 중국의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이 걸려 있는 한중FTA 후속 협상 개시에 동의하는 한편, 한국 측에는 자국의 안보 우려에 관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러시아도 동아시아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24일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일본 외상을 만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10월 중순에 사전 예고가 없던 비상 훈련(한미 해군 훈련)을 했고, 최근에는 새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마치 그들[북한]이 인내심을 잃고 한 번 더 일을 터뜨리길 기다려 마침내 군사습선을 취하려는 듯하다.”

따라서 약 두 달간 사태를 관망하는 듯하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익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나온 21일 정부는 소성리 사드 배치 지역에 주민들의 반발을 강제 진압하고 사드 공사 장비를 추가 반입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추진하지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다. 설사 올림픽 기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된다 해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테지만 말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갈등과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가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앞으로 긴장이 일시 이완되는 국면은 있겠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전반적 추세는 좀 더 위험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진보·좌파가 앞으로 평화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김영익

※ 본지 웹사이트에서 관련 기사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도 함께 보시오.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전주현

천주교와 개신교의 우파가 최근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과 ‘사회적 공론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낙태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주교 쪽 낙태 반대론자들은 정의당의 심상정과 이정미 의원이 가톨릭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며 신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리스도교 우파는 “임신된 아기의 생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밖”이고, “낙태는 유아를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강간에 의한 임신,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유전될 수 있는 상황,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조항조차 폐지하라고 2000년에 입법 청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낙태권은 여성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하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을 성취하려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대립되지 않는다면 쟁점을 피하기보다 태아의 생명권 논리를 분명히 반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태아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다

태아는 인간이 될 잠재력을 가진 생명이지만, 독립된 인격체는 아니다. 태아는 모체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태아가 ‘권리’를 지닌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면 여성의 몸은 그저 태아가 살아가는 환경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게 된다.

태아가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되기 때문에 낙태가 살인이라는 논리는 단순한 비약이다. 이런 논리를 따르면, 도토리를 밟는 것은 상수리 나무를 죽이는 것이고, 달걀을 깨는 것은 닭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태아가 인간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를 누려야 한다면, 배아와 수정란도 모두 생명권을 가진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수정란이 인간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는 궤변이다. 인간의 모든 체세포에는 인간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체세포를 없애는 것, 예를 들어 각질을 제거하고, 손톱을 깎고, 머리카락을 뽑는 등의 행위도 모두 살인이라는 말인가?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 시술기가 자궁 안으로 들어왔을 때 태아가 “죽지



김미영 기자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 낙태 권리는 여성해방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영상상을 보여주며 낙태에 대한 죄책감을 부추긴다.

1984년 미국에서 제작된 낙태 반대 영화 《소리 없는 비명》이 한국에서 성교육 자료로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이 영상은 의도적으로 조작됐음이 밝혀졌다. <한겨레> 2017년 9월 12일치 “죄책감 갖게 만드는 부정확한 성교육…‘낙태의 진실’ 호도”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임신 6개월 이내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움직임도 특정 자극에 대한 반사반응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아의 인지능력과 식별능력은 대뇌 피질과 신경, 신경전달물질인 호르몬 등이 발달해야 생기는데, 이는 임신 후기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영국 왕립대학교 산부인과 연구진도 태아는 6개월이 되기 전까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임신 후기에서 출산 전까지 태아가 인간과 유사하게 발전하지만, 그럼에도 흔히 말하듯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한’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 논리는 ‘생명 존중’이 아니라 여성의 결정권을 부정하는 논리이다. 모체에 완전히 종속된 태아를 제거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신한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가 생명경시 풍조 조장?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를 허용하면 무분별한 낙태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떠난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낙태 불법화 때문에 여성

들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강그리 무시한다.

보수 우파들이 ‘생명 존중’ 운운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위선이다.

미국에서는 반낙태 우익들이 낙태 시술소를 공격해 불을 지르거나 여성과 의료를 살해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중동 등지에서 수많은 민중을 학살하는 전쟁을 치른 미국 지배자들 중에도 낙태반대론자들이 많다.

가톨릭과 보수 개신교는 ‘생명 교리’를 내세워 낙태를 반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낙태 입장은 역사적으로 변모해 왔다. 태아를 존존한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수정란도 생명이 있다고 천명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본지 216호 “낙태의 역사 — 원시 사회에서 자본주의까지” 기사 참고)

한국 천주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인간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회칙’ <생명의 복음>을 낙태 반대 교리로 삼는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는 칠레의 피노체트 같은 군사 독재 정권들을 옹호한 반면, “기초공동체(민중교회)”와 “해방신학”을 비난하고 징계한 보수적인 전통주의자다.

낙태를 죄악시키는 천주교와 보수 개신교는 정작 박정희 정부가 1960~70년대에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은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는 인구가 많으면 경제 성장률을 낮춘다며 여성들에게 피임과 낙태를 공공연하게 권장했다. 1970년대에 성가병원 같은 가톨릭계 병원에서도 하루에 수십 건씩 낙태 시술을 진행했다.

낙태는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추상적인 ‘생명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투성이고, 흔히 우파의 위선적인 사회 통제 시도에 이용된다.

‘태아의 생명권’ 운운하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로 보지 않는 수구반동적인 주장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없이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무책임한 것이다.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같은 재생산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여성 해방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낙태권은 여성 해방을 위해 꼭 쟁취해야 할 핵심 요구이다.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태아 생명권” 논리에 위축되지 말고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라며 당당하게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옹호해야 한다.

▶ 관련기사 2편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간식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